

이슈브리프 866호
(2026. 7.16)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평가와 북중관계 전망

제866호

김규범 gbkim@inss.re.kr



국문초록

2026년 7월 열린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는 단순히 양국의 동맹을 과시하는 행사가 아니라, 2025년 9월 이후 회복된 북중관계를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구체화한 계기로 평가된다. 박태성 총리의 방중 기간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핵심 지도부가 연이어 회담을 개최했으며, 양측은 전통적 우호를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략적 '공동인식'과 그 '이행', 그리고 경제, 민생 분야 협력 확대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특히 과거 북중 고위급 회담에서 빠지지 않았던 비핵화 문제가 이번에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고, 대신 정세 안정과 경제협력이 핵심 의제로 부상한 점은 북중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최근 북중 양국이 발신한 일련의 메시지를 종합하면, 양측은 한반도 정세를 관리 가능한 안정 국면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전략적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와 기술경쟁력을 축적할 시간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전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발전과 대외환경 개선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수렴되면서, 이번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는 전통적인 동맹의 가치만 강조하기보다, 기존 조약을 전략적 공동인식과, 한반도 정세 관리, 경제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대내외 선언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키워드: 북중관계, 북중우호조약, 동맹, 시진핑, 박태성

2026년 7월 11일, 북한과 중국은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이하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았다. 북한은 박태성 내각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당·정부 대표단을 베이징에 파견했고,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핵심 지도부와의 연쇄 회견을 마련하며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의전으로 화답했다.

1961년 7월 11일 체결된 북중 우호조약은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상대국이 즉각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한 명실상부한 동맹 조약으로, 오랫동안 북중 혈맹의 상징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이 조약이 항상 성대하게 기념된 것은 아니다. 기념행사의 규모와 형식은 양국 관계의 부침에 따라 크게 달라졌으며, 행사의 양상은 당시 북중관계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일종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양국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던 2016년에는 조약 체결 55주년이었음에도 별도의 기념행사가 열리지 않았다. 또한 2010년대 중국 언론과 학계에서는 조약의 사문화(死文化), 조약 갱신 중단설, 나아가 중국의 동맹 포기론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가 이례적으로 성대하게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향후 북중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박태성 총리 방중의 주요 내용과 특징

박태성 총리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북한 총리의 단독 방중은 2011년 9월 최영림 총리 이후 15년 만이다. 대표단에는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문성혁 국제부 부부장 등 대외정책 담당자와 총리 측근이 포함되었다. 대표단은 첫날에는 시진핑 주석과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차례로 접견하였고, 기념행사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핵심 측근인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과 회동했다. 둘째 날인 11일에는 카운터파트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공식 회담을 가졌다.

이번 연쇄 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양국 외교적 수사의 진전이었다.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조하는 레토릭은 유지되었지만, 그 위에 정세에 관한 “공동인식의 확인”, “관계 발전의 청사진(또는 설계도) 마련”, 그리고 이를 “이행” 해야 한다는 표현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양국이 정세에 대한 “전략적 평정심”과 “전략적 자신감”을 유지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도출한 공동인식을 이행하여 “각자의 사회주의 건설에 유리한 외부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성 총리 역시 이에 호응하며 북중관계를 “가장 강력한 전략적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전달했다. 과거 양국이 “전략적 소통과 조율”의 강화 등 소통 자체를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공동인식을 확인하고 관계 발전의 전략적 방침을 마련했으며 이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양측이 단순한 관계 관리 차원을 넘어 향후 북중관계의 발전 방향과 한반도 정세 대응에 관한 새로운 전략적 합의를 도출했음을 시사한다.

11일 열린 리창 총리와의 공식 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 합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리창 총리는 양국의 새로운 5개년 경제계획을 연계하고, 경제, 무역 협력 확대, 교통, 물류 연결성 강화, 보건, 의료, 교육 등 민생 분야 협력을 심화하자고 제안했다. 박태성 총리도 경제, 과학기술, 인문 교류 확대와 국제문제에서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북중관계에서 총리급 상호 방문은 전통적으로 경제협력을 구체화하는 실무 협의의 성격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2011년 최영림 총리의 방중이다. 당시에 도 정상 간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다. 지난해 10월 리창 총리의

방북과 이번 박태성 총리의 방중 역시 정상 간 합의를 경제와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으로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이번 박태성 총리의 방중은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의전 수준과 대표단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과거 부총리급 교차 방문과 달리 이번에는 총리급 단독 방문이 이루어졌고,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지도부 서열 2·3·5위까지 연이어 회담에 나서는 최고 수준의 예우를 제공했다. 둘째, 논의의 중심이 외교, 안보 현안에서 경제, 민생, 과학기술 등 실질적인 협력과 실행 과제로 이동했다. 셋째, 비핵화 의제가 사라졌다. 2011년 최영림 총리의 방중 당시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가 주요 의제로 언급됐지만, 이번에는 양측 발표문 어디에도 비핵화가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방중의 핵심은 비핵화 의제의 후퇴, 새로운 전략적 공동인식의 확인과 이행, 그리고 제재 아래에서 가능한 경제협력의 구체화로 요약된다.

북중 우호조약의 재해석과 전략적 ‘공동인식’

북중 양국은 이번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최근 형성된 전략적 ‘공동인식’을 기존 조약의 틀 위에서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중 우호조약은 흔히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상대국이 즉각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한 제2조를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조약의 전체 내용은 사실 그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제1조는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및 각국 인민의 안전을 위한 공동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양국의 공동이익과 관련된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협의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5조는 경제, 기술 원조와 경제, 문화, 과학기술 협력을, 제6조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극동 지역의 평화 및 안전 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조약의 내용과 이번 기념행사에서 중국이 강조한 메시지를 종합하면, 이번 기념행사의 핵심은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재차 부각하는 데 있기 보다, 북중 우호조약 전체를 전략적 소통과 한반도 정세 관리, 경제협력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법률적 기반으로 재해석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이번 기념행사에서 북중 우호조약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적, 법률적 토대” 라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북중 양국은 이번 65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북중 우호조약을 전통적인 군사동맹의 상징을 넘어, 양국의 새로운 전략적 공동인식과 협력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재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중관계 개선을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미일 협력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 특히 대일 견제의 일환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물론 앞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국을 직접 겨냥하고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연계될 경우 중국이 북한과의 협력을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최근 북중관계 개선의 핵심 배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금보다 훨씬 첨예했던 바이든,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중국은 북한과의 진영 결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신냉전’ 구도를 강조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밀착을 시도했지만, 중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역내 미군 전력 증강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더욱이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중 압박 강도가 다소 완화되고, 중국의 외교적 활동 공간도 이전보다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스스로 미국과 한국의 경계심을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번 65주년 기념행사는 북중 또는 북중러 군사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려는 신호라기보다,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된 전략을 재확인하는 정치적 의식에 가까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북한의 체제 안전과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북한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며 대외행보를 중국과 긴밀히 조율한다는 전략적 합의를 양측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행사였다고 볼 수 있다.

대북 제재 아래 북중 협력 공간의 확대

앞으로 북중관계는 단순한 신뢰 회복을 넘어,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 양국은 대북 제재 이행과 협력 확대라는 상반된 요구 사이에서 지속적인 마찰을 겪어왔다. 북한 노동자의 체류와 송환, 관광 재개, 국경 통관 등을 둘러싼 이견은 2024~2025년 북중 관계가 냉각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 양국이 발신한 일련의 메시지는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허용하거나 묵인할 수 있는 협력의 범위에 대해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시사한다.

가장 먼저 나타날 변화는 접경지역 교통과 통관의 정상화일 것으로 보인다. 북중 여객열차와 항공편의 증편, 접경지역 통관의 전면 정상화, 신압록강대교 개통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북중 교역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유엔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한 2010년대 초반과 같은 대규모 자원개발이나 산업투자가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신 보건, 의료, 교육, 농업, 경공업, 지방경제, 재난관리 등 민생 분야가 새로운 협력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분야는 제재 위반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과 동북3성 경제 활성화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도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국제 사회의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협력 분야다.

유학생과 기술연수 인력을 중심으로 한 인적 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설비나 전략물자의 직접 이전은 제재로 인해 제약이 크지만, 북한 인력을 중국으로 보내 기술과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추진하기 쉽기 때문이다. 박태성 총리의 텐진 방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력 정치인인 천민얼과의 회담은 양국 관계의 장기적 협력 기반을 다지는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텐진항과 북한 항만을 연계하는 새로운 물류 경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양국 협력이 확대되더라도 그 범위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존재한다. 중국은 북한의 급격한 핵·미사일 능력 증강이나 고강도 군사도발을 결코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규모 군사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그 결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초래할 경우 북중관계는 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앞으로의 북중관계는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인 동맹 강화라기보다, 북한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중국이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확대하는 ‘조건부 협력’의 성격을 띠는 가능성이 높다.

시사점

이번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의 핵심 메시지는 동맹의 부활이라기보다,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북중 정상 간 전략적 합의와 제재 아래에서도 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확인한 데 있다. 북중 우호조약은 이러한 전략적 합의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법률적 기반으로 다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북중관계의 개선을 곧바로 안보 위협으로 연결해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이 주변국과의 소통 없이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결정하는 상황보다,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일정한 자제와 안정적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한반도 평화에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물론 비핵화를 실현하는 방법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입장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거나 상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데 머문다면 한반도 문제는 앞으로도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 지금은 완전한 합의를 기대하기보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미, 남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통 목표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중국과의 고위급 전략대화를 더욱 활성화해 북중관계의 변화와 북한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이 북한에 전달해야 할 우리의 입장과 메시지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북중관계의 복원 자체를 위협으로만 바라보기보다, 중국이 북한과 유지하고 있는 소통 채널을 한반도의 안정과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과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